

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Ⅲ.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</p> <p>1.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</p> <p>가. ~ 카. (생략)</p> <p>타. (생략)</p> <p>- 다만,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 거래에 의한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와의 차이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의 7% 미만으로서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.</p> <p>2. 유가증권·부동산·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</p> <p>가. ~ 라.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 <p>3.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</p>	<p>Ⅲ.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</p> <p>1.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</p> <p>가. ~ 카. (현행과 같음)</p> <p>타. (현행과 같음)</p> <p>파.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----- ----- ----- -----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----- -----</p> <p>-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자금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한다.(유가증권 등 자산거래, 부동산 임대차, 상품·용역거래, 인력제공 등에 의한 지원행위의 거래총액 판단에도 이를 준용한다)</p> <p>2. 유가증권·부동산·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</p>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% 미만이고,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자산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.</p> <p>3.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</p>

현행	개정안
가. ~ 다. 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라. <u>실제 임대료·임차료와 정상 임대료·임차료의 차이가 정상 임대료·임차료의 7% 미만이고,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부동산 임대차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.</u>
4. 상품·용역을 거래한 경우	4. 상품·용역을 거래한 경우
가.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	가.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
1). ~ 5). (생략)	1). ~ 5)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6) <u>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거래된 상품·용역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% 미만이고,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·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.</u>
나.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	나.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
1). ~ 4). (생략)	1). ~ 4)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5) <u>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·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이고,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.</u>
	- <u>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은 매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다만,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,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본다.</u>

현 행	개 정 안
<p>5. 인력을 제공한 경우</p> <p>가. ~ 다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5. 인력을 제공한 경우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라. 실제지급급여와 정상급여의 차이가 정 상급여의 7% 미만이고, 거래당사자간 제공된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 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.</u></p>
<p>Ⅳ. 부당성 판단기준</p> <p>1. 부당성 판단의 기본원칙</p> <p>가. ~ 마. (생 략)</p> <p><u>바.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 로 인한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</u></p> <p><u>사. (생 략)</u></p> <p><u>아. (생 략)</u></p>	<p>Ⅳ. 부당성 판단기준</p> <p>1. 부당성 판단의 기본원칙</p> <p>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바. (생 략)</u></p> <p><u>사. (생 략)</u></p>
<p>Ⅶ. 재검토기한</p> <p>공정거래위원회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 규에 대하여 <u>2022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부칙 <제355호, 2020.9.10.> 이 지침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Ⅶ. 재검토기한</p> <p>----- ----- ----- <u>2023년 1월 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- ----- -----</p> <p><u>부칙 <제000호, 2022.00.00.></u> <u>이 지침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